

01

TRADE & ORIGIN 동향

■ 한국원산지정보원,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발간

■ 관세청, 중국 해관 초청 K-푸드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 관세청, 주요국 통관 변화·분쟁 사례 공유 ...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 FTA 동향

- 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남미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 ②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 상품·서비스 개방 및 공급망 협력 논의
- ③ 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16년 만에 PTA 협상 재개,
자동차·핵심광물 등 논의 전망

TRADE & ORIGIN REPORT



TRADE & ORIGIN 동향

한국원산지정보원,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발간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번 가이드북은 최근 미국이 무역 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통상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는 한편, 집행 및 보호법(EAPA) 조사를 통해 우회수출 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통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개 파트로 구성됐다.

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판단 체계 차이를 비교하고,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부터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PART 2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관세),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관세법 제701조·제731조(상계·반덤핑관세), 관세법 제338조(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등 한국산 제품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주요 통상법령의 현황과 세율 구조를 정리하고, 관세법 제307조(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와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대응 관세)를 붙임으로 수록했다.

PART 3

대미 수출 통관 실무 가이드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부터 입항 전 보안 신고, 반입신고, 납세신고 및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대미 수출 전 과정을 5단계로 체계화하고, CBP Form 19-28·3461·5106·7501 등 실무에 필요한 양식을 부록으로 함께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과세 방식 변경(2026.4.6. 시행),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한국산 최대 12.5% 추가관세 부과(2026.7.24.),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의 첫 발동(2026.8.19. 발효) 등 최근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산정 구조와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한국원산지정보원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 등 내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원산지 판정, 관세율, 통관 규정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중국 해관 초청 K-푸드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청은 8월 26일(수) 서울세관에서 중국 해관,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중국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식품 수입 관련 제도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변화 동향, ▲수입식품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수출 지원사업 및 우수 대응 사례, ▲K-푸드 유망품목의 FTA 활용 방안 등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은 법정검사 대상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생산기업 등록 취소 사유를 넓히는 등 수입식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표시 라벨과 통관서류 간 정보의 일치 여부, 생산시설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 3월부터 적용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되고, ‘무첨가’·‘제로 첨가’ 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만큼 제품 선적 이후 수정하기보다는 라벨 제작 단계부터 중국의 표시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가 해외 식품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통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인스턴트 누들과 커피 추출물·농축액을 사례로 품목별 FTA 활용 현황과 관세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와 협정별 주요 특이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aT는 현지화 지원과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를 소개했다.

관세청은 중국 통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사전별로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 불허 사례와 제도 변화 등 현지 통관동향을 적기에 파악·전파하고, 중국 해관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통관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주요국 통관 변화·분쟁 사례 공유 ...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8월 25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이 참여해 현지 통관 현안을 공유했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각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혁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사진 : 관세청

미국의 경우 세관의 수입업자 규제 강화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안내했으며, EU의 관세개혁과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일본의 AI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편리화 정책 추진계획,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 등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제도 변화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사례, 태국의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 시 주요 확인사항,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 등 국가별로 수출기업이 실제 통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90개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130여 건의 질의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통관절차,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의 통관환경 변화를 미리 살피고,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지 관세관을 통해 통관제도 변화를 신속히 안내하고, 기업별 통관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남미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한-브라질 정상회담(07.27)[출처: 청와대]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시장 개방 수준과 위생·검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순방에서 한국과 브라질은 연내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고, 아르헨티나 역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체 8단계 절차 가운데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미국·캐나다·호주산과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07.31)[출처: 청와대]

정부는 브라질과 경제·통상위원회를 가동하고, 아르헨티나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하는 등 남미 주요국과의 교역·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벽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방침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부는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과는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탐사·개발·가공 등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과 투자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칠레 및 아르헨티나와는 각각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과 구리 등 주요 광물 분야에서 기업 간 투자와 공동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는 리튬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와 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기업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구리 등 다른 핵심광물 분야로도 국내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가 추진된다. 국내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으며, 품질과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 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국은 향후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로도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브라질과는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아르헨티나와는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교역·투자 및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 식품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과 문화·교육·인적교류 확대도 추진하며, 방산·우주·남극·보건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②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상품·서비스 개방 및 공급망 협력 논의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본격화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구조와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산업통상부는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6년 개시 이후 양국의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6년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어,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2차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제13차 협상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상호 구체적 관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분야와 추가 개방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전략적 산업협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도 협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협의한다. 양측은 분과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운영 방안과 주요 의제, 향후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는 약 14억3천만 명의 인구나 4조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대형 시장이지만, 2025년 한-인도 교역 규모는 256억 달러에 그쳐 경제 규모가 비슷한 아세안(ASEAN)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협상을 통해 기존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과 전략산업 협력까지 포괄하는 양국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③ 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16년 만에 PTA 협상 재개, 자동차·핵심광물 등 논의 전망

인도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이 16년 만에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재개한다.

8월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협상 범위와 목적, 절차 등을 규정한 협상세척(ToR)에 서명했다. 양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번 ToR 서명을 계기로 사실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

SACU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다. 1910년 결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 전체 인구는 약 6,500만 명이다.

PTA는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폭넓게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당사국들이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의 협정이다.

ToR 서명은 SACU의 핵심 구성국인 남아공이 인도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피유시 고알 인도 상공부 장관은 공정한 PTA 체결이 인도와 SACU 회원국 모두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협상이 수개월 내 종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통상부 관계자도 양측이 균형 있고 호혜적이며 발전지향적인 협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은 향후 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약품, 기계류, 전기장비 등에 대한 SACU의 관세 인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은 석유제품에 이어 인도의 對SACU 수출에서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5~2026 회계연도 인도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17억달러(약 2조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ACU에 대한 인도의 수출은 75억달러(약 10조6천억원), 수입은 92억달러(약 13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2025~2026 회계연도 인도의 對SACU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17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도의 對SACU 전체 수출은 75억달러(약 10조6천억원), 수입은 92억달러(약 13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아공과의 교역은 인도 수출 70억달러, 수입 85억달러 규모다.

인도는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뿐 아니라 백금족 금속(PGM)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